
언어 관습을 바탕으로 한 규범 정하기

-외래어표기, 특히 한자음 표기 규정과 관련하여-

최경봉 · 원광대학교 교수

현행 외래어표기법은 원음(原音)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언어 관습을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하에서는 관습을 수용하기 위한 예외 규정이 필요한 한편, 원칙을 견지하기 위해 관습을 부정하는 엄격함이 필요했다. 그 결과 규범은 복잡해지고, 관습과 원칙의 괴리는 심화되었다. 이는 한자로 이루어진 일본과 중국의 고유명(인명과 지명) 표기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태도는 규범 제정의 목적을 되돌아보고 규범의 변천 과정을 되짚어보면서, 규범의 취지와 변천의 계기를 면밀히 살펴보는 일일 것이다. 이를 통해서만 현행 외래어표기법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논의도 이러한 관점에서 진행할 것이다.

1. 외래어표기법은 ‘외래어는 우리말화한 외국어’라는 인식의 결과물이다

이극로는 1935년 6월 29일 조선음성학회에서 외래어의 개념과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역사적인 강연을 한다. 조선어학회는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6장 60항¹⁾에 외래어표기의 원칙을 제시한 바 있었지만, 이 조항이 의미하는 바를 명시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1)李克魯, 「外來語 表記法에 對하여」, 『한글』 25, 1935

“외래어가 우리말에 들어오는 때에는 우리화를 하는 것이 옳다. 이것은 어느 민족의 말에나 외래어를 자기화(自己化)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중국사람은 아라사라고 쓰는것을 ‘아국’이라고 쓰며, 일본사람은 ‘로시아’라고 쓰는것을 ‘로국’이라고 쓴다. 일본을 영국사람은 ‘쨌펜’이라 하고, 독일사람은 ‘야판’이라 한다. 중국을 영국사람은 ‘쑤이냐’라 하고, 독일사람은 ‘시냐’라 한다. 서울을 영국사람은 ‘세울’이라 하고, 독일사람은 ‘쇠울’이라 한다. 그러니 어느 것이 자기화 아닌 것이 없다.”

위 발표문의 핵심은 외래어표기의 원칙을 세울 때는 자국어의 언어 관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극로가 이 점을 강조한 것은 외래어와 외국어는 다르다는 점을 말하기 위해서였다. 문란한 외래어표기의 통일을 위해서는 외래어와 외국어를 구분하여 인식하는 태도가 절실했던 것이다.

당시에는 외국어를 정확히 배울 목적으로 발음을 전사(轉寫)하는 것과 외래어표기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구 외래어를 표기하기 위

1) 第六章 外來語 表記

第六〇項 外來語를 表記할적에는 다음의 條件을 原則으로 한다.

(一) 새 文字나 符號를 쓰지 아니한다.

(二) 表音主義를 取한다.

해 새로운 문자를 만들거나 우리말 표기에서 사용하지 않는 장음(長音)을 표기하거나 원어(原語)의 철자를 따져 원음을 전사하는 등의 시도는 이러한 인식 태도를 보여주는 예이다. 조선어학회에서는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통해 이러한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外來語表記法統一案」(1941)을 통해 국어 현실을 바탕으로 외래어표기를 통일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원음에 맞게 써야 한다는 주장은 「外來語表記法統一案」이 발표된 이후에도 계속 제기되었다. 원음에 맞게 써야 한다는 주장은 해방 이후 문교부의 ‘外來語表記法’(1948)에 반영되었고, 「들은말 적는 법」(1952)으로 이어졌다. 이 안은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함에는 원어의 철자나 어법적 형태의 어퍼함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표음주의로 하되, 현재 사용하는 한글의 자모와 자형만으로써 적는다.”라는 「外來語表記法統一案」의 대원칙이 전면적으로 부정되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²⁾

(2) 「들은말 적는 법」(1952)에서의 원음 표기 시도의 예

- 가. New York 뉴우욕
- 나. girl[go:l] 거얼
- 다. film 엘름
- 라. stove 스토우옌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결국 현실에 뿌리 내리지 못한다. (2가-나)는 우리말 표기에 나타나지 않는 장음을 외래어표기에 사용함으로써 문제가 되었으며, (2다-라)는 한글 자모에 없는 표기를 만들어 특정 음을 표기하려 함으로써 문제가 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외래어라 하더라도 국어의 음운체계에 맞게 그리고 언중들의 언어 감각에 맞게 표기되어야 한다는

2) 문교부의 ‘外來語表記法’(1948)에서는 한글 자모 이외의 글자나 부호를 사용하여, [f]를 ‘ㅍ(으)’, [v]와 [β]를 ‘ㅂ(으)’으로, [z]와 [ʒ]를 ‘ㄷ’으로, [l]을 ‘ㄹ’로 표기하였고 장모음을 표기에 반영하였다.

사실을 말해 준다.

그렇다면 원음대로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다른 나라에서는 외래어의 원음을 고수하기 위해 이처럼 고군분투(孤軍奮鬪)하는 경우를 거의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자못 신기하기까지 하다.

2. 외래어표기법에서는 왜 원음에 가깝게 쓴다는 원칙이 강조되었을까?

현행 로마자표기법에서는 한국어의 음운체계와 국어 현실에서의 관용을 존중하는 원칙을 세우고 있지만, 최대한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고자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원음 표기 원칙은 외래어표기법이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원칙이었다. 따라서 실제에 있어서는 국어 현실의 관용이 원음 표기에 자리를 내주는 경우가 많다.³⁾ 그렇다면 외래어의 원음 표기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인가?

그러나 로마자를 사용하는 언어권에서는 나라마다 로마자를 운용하는 원칙과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로마자로 쓰인 타국의 단어를 자국어의 음소-자소체계에 따라 읽고 쓰게 된다. 다음 예를 보자.

(3) 인명의 반원지음주의의 예⁴⁾

- 가. Socrates (그) 소크라테스: (영) 소크러티즈, (프) 소크라라트,
(독) 소크라테스, (스) 소크라티스
- 나. George (영) 조지: (프) 조르주, (독) 게오르크, (스) 호르헤,
(이) 조르지오, (그) 게오르기오스

3) 「外來語表記法統一案」(1941)에서 관용을 인정한 예로 거론되었던 '납포(lamp)'가 '램프'로 변화된 예를 들 수 있다.

4) 김민수(2004)에서 재인용.

(4) 지명의 반원지음주의의 예⁵⁾

- 가. Greece (영) 그리스: (프) 그레스, (독) 그리헨란트, (라) 그라에키아, (古그) 헬라스, (現그) 엘라스
- 나. Hungary (영) 헝가리: (프) 옹그리, (독) 운가른, (라) 흥가리아, (형) 마자로사그
- 다. Wien (독) 빈, (영) 비에너, (프) 비엔느, (스) 비에네스, (이) 비엔나

(3)과 (4)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한 가지로 표기된 인명과 지명은 나라에 따라 다르게 읽힌다. 그런데 원음에 따라 읽으라는 규범을 정하게 된다면 이로 인한 혼란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로마자 문화권에서 인명과 지명은 철자가 변하지 않고 발음이 나라마다 달라진다. 그런데 인명과 지명이 아닌 경우에는 자국어화가 진행되면서 발음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자국어의 자소체계에 따라 철자가 달라질 수도 있다.

(5) 독일어의 경우

- 가. Computer
- 나. Journalist
- 다. Phase
- 라. Zigarette(영. cigarette)
- 마. Korps(영. corps)

(5가-다)의 경우는 독일어의 자소 체계에 없는 'c, ph, ou' 등이 포함된 영어 외래어이다. 반면 (5라-마)는 영어 외래어의 원 철자를 독일어의 자소 체계에 맞게 변화시켜 사용하는 예이다. 이는 외래어가 언중들 사이에 익숙해지면 발음뿐만 아니라 철자까지 변화시켜 자국어화한다는 것을 말

5) 김민수(2004)에서 재인용.

해 준다.⁶⁾ 그러나 발음과 철자의 규범은 관습에 기반하므로 큰 논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로마자가 국제 문자로 통용되는 현실에서는 로마자를 사용하지 않는 언어권의 외래어도 로마자로 전환되어 수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 발음은 자국어의 로마자 발음 관습에 따르게 된다. 그러니 원음 표기가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 논란이 있다면 철자가 바뀐 것을 규범으로 하느냐 아니면 외래어의 철자를 그대로 용인하느냐의 논란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음 표기를 중시하게 된 것은 로마자 표기의 언어 관습이 없는 상태에서 로마자로 쓰인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해야 했던 상황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外來語表記法統一案」(1941)도 우리의 표기 관습과 다른 언어권의 외래어(특히 서구 제어)를 표기하기 위한 것으로, 통일안에서 제시한 ‘表音主義’ 원칙은 이러한 문자를 읽거나 쓰는 고유의 관습이 없는 상태에서 원음에 대한 조선어적 수용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外來語表記法統一案」의 취지에 따른다면, 외래어표기 원칙은 한자를 사용하지 않는 언어권의 외래어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을 명시하기 위해 「外來語表記法統一案」의 ‘제3절 제17항’에는 “本案의 規定은 漢字音이나 國語音에 對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라고 밝히면서, 國語音(일본어 음)의 경우에는 부록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는 서구 외래어와 한자로 이루어진 외래어를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야 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

6) 임환재(2005)에서는 독일 표기법에서의 외래어표기법의 특징을 거론하면서 국제 공통어의 경우는 자국어화한 표기를 사용하기보다 원어의 표기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3. 원음 중심 표기가 왜 문제일까?

원음 중심 표기의 폐해로 지적되어 온 「듣은말 적는 법」(1952)의 표기 체제는 이후의 외래어표기법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도가 언중들에게도 수용되지 않았다. 또한 원음 중심의 표기 방식을 외래어표기법의 대원칙으로 삼으면서도 국어 생활에서의 관용성을 상당 부분 인정함으로써 관습과 원칙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외래어는 우리말화한 외국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면서, 표음주의 원칙에 따라 원음에 가깝게 표기한다는 원칙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보면 현행 외래어표기법은 「外來語表記法統一案」의 취지를 이어받은 합리적인 규범이라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행 외래어표기법의 원음을 존중하는 태도가 극단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왜 이런 비판에 직면해 있을까? 문제는 원음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일본어와 중국어를 포함한 모든 외래어에 획일적으로 적용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앞 절에서 「外來語表記法統一案」의 표기 규정에서는 한자음에 대한 규정을 배제시키고 있음을 거론한 바 있다. 그렇다면 「外來語表記法統一案」에서 한자음을 규정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검토가 차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음 중심 원칙을 모든 외래어에 적용하려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중일(韓中日)의 인명과 지명은 각자의 전통에 따라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대부분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이는 로마자를 사용하는 언어권의 상황과 유사하다. 한자를 공통으로 사용하지만 이를 읽는 관습이 나라마다 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로마자를 사용하는 언어권의 경우에 미루어 볼 때, 한자로 이루어진 일본과 중국의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할 때는 한국 한자음으로 표기하는 것이 자연

스러운 선택일 것이다. 『外來語表記法統一案』에서 한자음에 대한 규정을 외래어표기 규정에서 배제시킨 것은 이러한 인식의 결과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후 외래어표기법은 이러한 인식 태도와 대립적이다. 중국의 인명과 지명에 대한 표기 원칙은 이후의 표기 규정에도 포함되었고, 현행 외래어표기법에는 일본어와 중국어의 표기 규정이 인명과 지명에 대한 표기뿐만 아니라 일반 표기 세칙에도 포함되어 제시되고 있다. 이는 한자를 한중일의 공통 문자로 인정하지 않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4. 한자음 관련 규정은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말 표기에서 한자를 완전히 없앤다면 현재의 외래어표기법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국어 생활에서 한자를 없애지도 그리고 없앨 이유도 없는 상황에서는 한중일의 인명과 지명 표기에 사용되는 한자를 공통 문자로 인정하고 그 표기 문제를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현행 외래어표기법 중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은 문제가 있다.

(6) 현행 외래어표기법(1986. 1. 7. 문교부 고시 제85-11)

제4장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

제2절 동양의 인명, 지명 표기

제1항 중국 인명은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 과거인은 종전의 한자음대로 표기하고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제2항 중국의 역사 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한자음대로 하고,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제3항 일본의 인명과 지명은 과거와 현대의 구분 없이 일본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제4항 중국 및 일본의 지명 가운데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허용한다.

〈보기〉 東京: 도쿄, 동경 上海: 상하이, 상해 등

현행 외래어표기법은 규정을 적용하는 차원도 복잡한데, 여기에 관용의 허용 여부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이 표기법에 따라 글을 쓴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현대인, 과거인, 역사 지명, 현재 지명 등의 용어는 규정을 위한 용어로는 적절하지 않다. 관습을 인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관용의 모호함 때문에 원칙을 적용하려는 경향이 나타나 규범의 경직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허용 조항보다는 원칙 조항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6)의 3항에서는 관용을 인정하는 다른 항목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규정의 일관성이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아래에 제시한 『표준국어대사전』의 일러두기 내용은 (6)의 3항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7) 『표준국어대사전』의 일러두기

일러두기를 보면 “중국과 일본의 인명·지명은 원음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한국 한자음으로 읽은 형태는 ‘~의 잘못’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한국 한자음으로 읽은 형태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이름’으로 뜻풀이 하였다.

〈예〉 풍신수길(豊臣秀吉) □ 『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잘못.

그러나 외래어표기법이 외국인을 위한 표기가 아니라 언어공동체 내의 소통을 위한 표기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처리 방법은 문제가 있다. 우리는 ‘풍신수길’이라는 이름을 역사적 인물의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외래어표기법에서 동양의 인명과 지명 표기를 특별하게 다룬 것은 ‘한자 문화권’의 특성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서구 외래어표기를 위한 원칙을 바탕으로 ‘한자 문화권’에서 연유한 외래어의

표기 규정을 마련한 것이 문제였다. 한중일을 한자 문화권으로 인식했다면 '원음에 가깝게 표기한다.'는 외래어표기법의 기본 원칙은 한자 문화권이 아닌 외래어, 특히 서구 외래어의 표기에 적용되는 원칙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로마자를 사용하는 언어권의 나라마다 이를 표기하고 읽는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고유명사의 경우 나라마다 그것을 읽는 방식이 다르다. 따라서 이를 원음을 기준으로 읽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한다면 혼란이 있을 것이다. 이는 한자로 된 고유명사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이다. 실제로 일본과 중국의 인명 및 지명을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비율과 이를 원음으로 읽는 비율을 따져 보면 어느 한쪽으로 획일화했을 경우에 생기는 혼란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음 표기를 원칙으로 설정한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이것이 외래어표기의 일반 원칙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자로 이루어진 외래어의 경우에는 원음에 가깝게 쓴다는 원칙보다는 관습을 중요시해야 함은 인명이나 지명이 아닌 경우의 표기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국어사전에 등록된 중국 요리의 이름

- 가. 팔보채(八寶菜)
- 나. 탕수육(糖▽水肉)
- 다. 간풍기[干烹鷄]
- 라. 라조기[辣子鷄]

위에 제시한 중국 요리는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요리이다. 그런데 이 명칭을 보면 (8가-나)처럼 한국 한자음으로 읽은 것도 있고, (8다-라)처럼 중국어 음에 가깝게 표기한 것도 있다. 중국의 어떤 요리든지 수용될 당시의 관습이 이 요리의 표기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이는 일본의 경우

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인명과 지명의 표기에서만 관습의 적용 범위를 제한한 것은 문제이다.

5. 관습을 부정한 규범은 언어 현실과 규범의 괴리를 심화시킨다

언어 규범은 언어공동체의 사회적 약속이다. 이는 언어 관습을 존중하면서 규범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한자음에 대한 외래어표기법은 원음 표기를 원칙으로 설정함으로써 실제와의 괴리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는 남한과 북한이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외래어표기법에서 한자음 표기 규정은 남한의 것과 기본적으로 같다. 그런데 다음 예를 보면 북한에서도 이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9) 북한에서의 중국 한자음 표기 사례

“호금도 동지는 낚시터 국민관에서 베이징을 떠나시는 김정일 동지와 작별인사와 담화를 나누시고 뜨겁게 전송하시였다.”, “김정일 동지의 방문을 환영하여 강택민 동지와 증경홍 동지는 만찬과 오찬을 차리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귀국 동중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천진시당 서기인 장립창 동지의 안내를 받으시며 개화발전되고 있는 천진시를 참관하시였다.”〈조선중앙통신, 2004. 4. 22./ 인터넷신문 업코리아 2004. 5. 22. 재인용〉

이와 같은 시기에 이를 주제로 한 남한 기사의 일부를 보자.

(10) 남한에서의 중국 한자음 표기 사례

“장쩌민의 최고 측근이자 실세 중 실세로 부상한 권력 서열 5위 쩡칭홍 [曾慶紅] 국가 부주석이 오리구이집에 동행하는가 하면 방중 첫날 후진 타오 주최의 만찬에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다음날 회

담이 예정된 우방귀[吳方國]와 원자바오[溫家寶]를 제외한」 전원이 참석했고 중국 군부의 실세들도 모두 참석했다.” <뉴스위크 2004. 5. 5./ 인터넷신문 업코리아 2004. 5. 22. 재인용>

남북한의 차이라면 남한의 경우 모든 인명을 중국 음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보아 공식적으로는 외래어표기법의 원칙을 지키려 한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남한에서는 외래어표기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봐야 할까? 그러나 실생활에서의 표기를 보면 이 원칙이 잘 지켜진다고 하기 어렵다. 이는 중국 한자음 표기에서 더욱 심하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인명이나 지명에 대한 표기는 한국 한자음에 따라 명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예로 중국 관광지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 여행사 광고는 거의 대부분 한국 한자음으로 지명을 표기하고 있다. 신문 광고가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중국 지명에 대한 한글 표기의 관습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고유명의 경우에는 그것의 속성을 이름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데, 원음 표기로 할 경우 이러한 추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외래어표기 규정과 상관없이 한국 한자음 표기가 선호될 수밖에 없다.

(11) 중국의 고유명 표기

- 가. 金門島 : 금문도 : 진먼다오
- 나. 天安門 : 천안문 : 텐안먼
- 다. 長江 : 장강 : 츠양지앙

(11가)의 금문도(金門島)를 한자를 병기하지 않은 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서 표기하면 ‘진먼다오’이다. 이 경우 진먼다오가 섬을 뜻하는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자를 병기하지 않을 경우 원 한자어가 한자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기도 어렵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11나)와

(11다)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이를 표기할 때 원음 표기 원칙에 따른다면 각각 ‘텐안면’과 ‘츠양지앙’이라고 해야 할 것인데, 이를 통해서는 ‘문’과 ‘강’의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다.

중국 고유명사의 조어법상 그 명사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 고유명사의 일부가 된다면, 고유명사의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를 ‘텐안문’이나 ‘츠양강’이라고 하든지 ‘텐안면 문’이나 ‘츠양지앙 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그간의 문화적 공통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언어 감각과도 많은 차이가 있어 언중들에게 수용되기가 어렵다.

국어 속에서 외래어나 외국어 단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외래어표기법이 원음에 얼마나 충실한가보다는 어문의 사용 면에서 얼마나 실용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그렇다면 외래어표기법의 개선 방안은 너무도 명확해진다.

6. 일본과 중국의 고유명을 모두 한국 한자음으로 읽어야 하는가?

일본과 중국의 인명과 지명을 어떻게 표기해야 하느냐는 ‘외래어표기법’의 일반 원칙과 ‘한자 문화권’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조화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외래어표기법의 취지와 한자 문화권의 특성에서 비롯된 언어적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과정을 보면 논점이 분명치 않은 채 주관적 혹은 정치적 의도에 따라 논의가 진행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이나 중국에서 우리의 지명을 자국의 관습대로 읽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자 사용 지역의 인명과 지명을 모두 한국 한자음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다. 주체성을 강조하거나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취지의 주장이다. 그러나 일본 고유명과 중국 고유명의 한자 표기 방식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획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한국 한자음은 일자 일음(一字一音) 원칙을 지킨다. 반면에 일본 한자음은 한자를 음으로 읽을 뿐만 아니라 훈으로도 읽으며, 낱말에 따라서는 음훈을 섞어서 읽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점은 음의 대응과 치환을 어렵게 한다. 그렇다면 일본 한자음을 원음에 따라 표기하고 수용하는 과정이 중국 한자음에 비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도 있다. 그런데 같은 한자 문화권이라고 하여 이러한 특성을 무시하고 모두 같은 원칙으로 표기해야 한다면 이는 문제이다. 특히 한자 문화권의 모든 인명 지명은 한국 한자음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철칙처럼 믿고 있는 것은 마치 원음에 가깝게 표기함을 원칙으로 정했기 때문에 한자 문화권의 인명과 지명의 표기 원칙도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이 문제에서도 언어 관습을 철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일본 한자음의 경우에는 원음과 한국 한자음이 뒤섞여 사용되는데, 이중 원음으로 읽는 경우가 많다. 이를 일제 강점기의 잔재이기 때문에 극복해야 한다고도 하지만, 현실의 지배적인 관습을 무시하는 것은 언어정책이 취할 바가 아니다. 그렇다면 한자음의 원음 표기가 문제라는 주장을 모든 한자음을 한국 한자음으로 통일하자는 주장으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7.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 한자음과 일본 및 중국의 한자음을 동시에 인정하면서, 삼국의 공통 문자인 한자를 통해 이들의 관련성을 연결시켜 주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의 문화적 공통성을 확인하는 것이며, 동시에 각 국가의 특수성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한자를 수용하여 언어문화를 발전시키면서 나름대로의 독음 체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어와 중국어의 한자음을 원음 그대로 차용하여 쓰기도 했고, 우리글 속에 한자를 노출시키는 어문 생활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일본의 인명과 지명은 과거와 현대의 구분 없이 일본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외래어표기법 4장 2절 3항)는 한국 한자음에 대한 이해를 전제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왜 그런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쓰고 허용 조항에 따라 한자를 병기한다고 할 때, 현재 워드프로 세스에서는 ‘풍신수길’이라는 독음을 치고 이에 맞는 한자를 골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글쓰기 관습에 따른다면 ‘풍신수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또 다른 이름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 한자음을 유지하는 문제와 일본어와 중국어의 원음을 한글로 표기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런 차원에서 한자음 표기의 대안을 제시한 다음 두 견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영만(2003)에서는 중국어 단어를 한글로 표기할 때에 다음과 같이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12) 김영만(2003)에서의 제안 요약

첫째, 한국 한자음을 쓰고 이어서 소괄호 안에 한자를 쓰는 것이다. 이 경우에 중국어를 아는 사람은 필요에 따라 한자를 보고 중국어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주은래(周恩來), 복단대학(復旦大學)이라고 쓴다.

둘째, 중국어 발음만 한글로 표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중국어 발음을 한글로 적고 그 오른쪽에 대괄호를 치고서 한자를 적는다. 예를 들자면 덩샤오핑[鄧小平], 시안[西安]처럼 적는다.

셋째, 한국 한자음과 중국어 발음을 모두 표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한국 한자음을 적고 그 오른쪽에 괄호를 치고서 한자와 중국어 발음 표기를 적는다. 예를 들면, 강택민(江澤民 장쩌민), 연변(延邊 연뎬)

등처럼 적는다.

김민수(2004)에서는 외래어표기법의 항목을 수정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있다.

(13) 외래어 동양 인명, 지명 표기(김민수(2004)에서 제시한 외래어표기 수정안)

제1항 한자로 표기된 동양의 인명, 지명은 과거와 현대의 구분 없이 원지음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 한자음으로 표기함을 허용하되, 어느 경우나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제2항 위 제1항에 포함.

제3항 위 제1항에 포함.

제4항 한자로 표기된 동양의 인명, 지명 가운데, 우리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지음으로 표기함을 허용하되, 어느 경우나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김영만(2003)의 경우는 중국의 한자음으로 논의를 제한하고 있어 일본과 중국 한자음을 구별하지 않고 원음과 우리 한자음을 동시에 허용하지는 김민수(2004)의 주장과 대등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의 두 제안은 원음과 우리 한자음을 동시에 허용하지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중국 한자음 표기로 제한할 경우 김민수(2004)의 안과 김영만(2003)의 안은 거의 일치한다. 이에 따른다면 현행 표기법의 원음 표기 원칙도 존중하면서 동시에 한국 한자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치점을 일본 한자음 표기까지 확장한다면, 한중일 삼국의 문화적 공통성을 확인하고 국어의 언어 관습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안의 차이점이다. 김영만(2003)에서 한자 표기를 필수로 규정한 반면, 김민수(2004)에서는 이를 허용으로 규정했으며, 김

영만(2003)에서는 원칙과 허용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김민수(2004)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 이러한 차이점을 어떻게 수렴해야 할까?

먼저 한자 표기 문제는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하는 현재의 어문규정에 따라 한자의 병기를 허용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원칙과 허용을 규정하는 문제는 원칙과 허용의 공존이 혼란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규정화한다면 “필요에 따라 원음으로 적을 수도 있고 우리 한자음으로 적을 수도 있다.”와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두 가지 대안은 원음과 한국 한자음을 모두 익혀야 한다는 점 때문에 경제성의 측면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특히 김영만(2003)의 셋째 안은 세 가지 형태를 모두 적는다는 점에서 친절하기는 하지만 너무 번거롭다. 그러나 김영만(2003)의 셋째 안을 제거한다면, 북경과 베이징, 동경과 도쿄를 동시에 인정하는 사례나 불란서(佛蘭西)와 프랑스를 동시에 인정하는 사례에 비취볼 때, 원음과 한국 한자음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 언어생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표현을 규범에 수용하지 못하여 오류를 양산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고, 이것이 언어생활을 비경제적으로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집약하여 인명과 지명 표기에 관련한 한자음 표기 규정을 제안하면 아래와 같다.

(14) 외래어 동양 인명, 지명 표기

한자로 표기된 동양의 인명, 지명은 원음 표기와 한국 한자음 표기를 모두 허용하되, 어느 경우나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한자를 병기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첫째, 한국 한자음을 쓸 때는 소괄호 안에 한자를 쓴다. 주은래(周恩來), 복단대학(復旦大學), 풍신수길(豐臣秀吉).

둘째, 원음 표기 시에는 대괄호를 치고서 한자를 쓴다. 덩샤오핑[鄧小平], 시안[西安], 도쿄[東京].

이렇게 규정한다면 언중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허용 조항이 규범과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스스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해당 분야에서의 관례나 독자층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판단은 그리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규범의 문제라기보다는 문체 선택의 문제가 된다.

참고 문헌

金敏洙(1973), 「國語政策論」,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김민수(2004), 「한자 표기 原地音主義의 문제」, 『새국어생활』 14-2.

金榮晚(2003), 「중국어 한글표기법 현황과 개선 방안」, 『중국어문논총』 25.

김태성(2007), 「중국 인명 및 지명 표기의 문제점」, 『바람직한 외래어 정책 수립을 위한 학술토론회』(제10회 한글문화토론회 자료집).

임환재(2008), 「독어 외래어표기법에서의 국제 공통어의 문제」, 『독어학』 17.